

“약자복지·인구위기 등 민생 8대 과제로 정책 경쟁하자”

윤재욱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세계 각국 의회, 국가혁신에 박차
우리 국회, 소모적 정쟁에 시간 허비”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제안과
전세사기·기후변화 대응 등 언급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각 정당이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8대 과제를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생계급여를 문제인 정부 5년 통틀어 20만원 인상했다고 지적한 반면,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해만 21만3000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비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

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인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개선되지 않는 인구 절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전세사기 피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강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우리가 탄소중

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 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3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을 꼽으면서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보호와 치료 차원의 접근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인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여야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당 “尹정권 폭정·검찰독재로부터 국민 지킬 것”

尹 폭정·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반드시 가결
고 채상병 외압의혹 등 15가지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권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결의를 모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쇄신을 요구하는 15가지 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폭정 저지, 내각 총사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통령과 국무위원이 야당을 향해서 듣기에도,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적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마침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 회기를 기다려서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감행했다. 평범한 국민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정권은 참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한참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에 이어 박범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고민정 최고위원,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

및 인적 쇄신,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안 처리, 검사 탄핵안 추진, 사상 최대 세수결손에 대한 지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홍범도 장군 홍상철 거 규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담겼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속도로 게이트, 언론 파괴를 ‘권력 사유화’, 이태원-오송 참사를 ‘무능한 행정’의 대표 사례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진행중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야당의 임명 동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결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장관 후보자에게도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의문은 “식민사관 쿠데타 찬양 인사 신원식 후보자, 실패한 재활용 인사 유인촌 후보자, 잠수 주식매각, 대통령 부인 20년 인연 김해 후보자, 이들 3인은 인사청문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21일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윤석열정권의 독재와 폭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이라며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전국의 당원,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까지 비상한 각오와 행동으로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野 “이균용 배우자, 형사처벌 대상” vs 與 “기록·현장 확인했나”

대법원장 후보자 2일차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2일차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틀째를 맞은 인사청문회는 이균용 후보자의 처남으로 운전학원을 운영 중인 김형석 옥산 대표이사, 함께 판사로 근무했던 이경준 전 서울회생법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조세법 전문가인 황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부산 만덕도 소재

산을 구입해 물려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해 현금 증여를 토지 증여로 세금을 바꾼 납부액을 대폭 줄인 것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현금 증여라고 판단해 1억3399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조세불복심판 청구를 통해 토지 증여로 명목이 바뀌어 기존 증여세보다 90% 이상 깎은 1133만원만 납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이에 대해 같은 시기 유사 판례 2건은 모두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 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했는데 매매로 등기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가 이 후보자 배우자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보신 건 아니지 않나”라며 “등기부등본을 봤다가거나 현장에 가봤던지 했나”라고 물었다.

황 교수는 현장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판단한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여야, 본회의서 한덕수 해임안 먼저 표결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진행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고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이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자 회동에 나서 21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상정 여부’에 대해 “저하고 윤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 견해가 각각 상이해서 상정에 대한 합의는 이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되지 않았으면 상정이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향후 추가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표결 순서’와 관련해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이렇게”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둘 다 상정 안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그는 ‘의장도 상정 안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안 났다”고 했다. ‘확정되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네 당연히”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